

### 3. 외환 위기시 멕시코와 한국의 재정정책 비교

- (배경) IMF로부터 외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멕시코와 한국은 그 시기와 경제 여건이 유사한 점이 많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측면에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
- (비교) 멕시코는 세수 증대와 공공부문 지출 감축을 통한 긴축 재정정책이, 한국은 건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재정정책이 주요 기조임
- (시사점) 재정정책 기조의 차이를 떠나서 구체적인 방안의 조속한 수립과, 공공부문 지출 축소와 실업 대책 지원 마련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

#### ○ 논의의 배경

- IMF로부터 외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멕시코와 한국은 그 시기와 경제 여건이 유사한 점이 많아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측면에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
- 멕시코는 95년 초부터, 한국은 97년 말부터 IMF에서 자금 지원을 받기 시작함
- 외환 위기의 원인 역시 경상수지 적자의 누중, 외채의 급증, 개방 경제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취약 등으로 유사함
- 따라서 외환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의 경제 정책, 특히 재정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함

#### <멕시코와 한국의 위기 원인 및 경제 상황 비교>

구 분		멕시코	한국
위기 원인의 공통점	경상수지 적자의 누적	94년 297억 달러(GDP대비 7.9%)	96년 237억 달러(GDP대비 4.9%)
	외채의 급증	95년 1,645억 달러(GDP대비 66.0%)	96년 1,607억 달러(GDP대비 33.2%)
위기의 경제 상황	환율	1달러당 95년초 6.81페소 → 95년말 7.85페소	1달러당 97년말 1,900원 → 현재 1,300~1,400원
	금리	95년 최고 80% → 96년 6월 26%	97년말 30% → 현재 20% 전후
	주식시장	94년 2,375p → 95년 1,447p	97년말 300p → 현재 500p 수준

#### ○ 멕시코의 재정정책

- 외환 위기시 IMF가 멕시코에 요구한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재정 및 통화의 긴축, 산업 구조조정, 금융 개혁 등임
-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가격 및 세율 조정에 의한 세수 증대와, 공공부문의 지출 감축이 주요 내용임
  - 세입 증대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, 유류 가격, 전기 요금 등을 인상하였음
  - 할인을 인하를 통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함
  - 철도, 연금, 통신, 공항, 항만, 전기, 가스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

123~145억 달러의 수입을 확보함

<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멕시코의 재정정책>

1차 경제안정화대책 (95.1.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정 긴축</li> <li>· 기초재정수지/경상GDP: 95년 2.6%→96년 3.4%</li> <li>- 공기업 민영화 조기 추진</li> <li>- 재정지출 대폭 삭감</li> </ul>
IMF 지원 조건 (95.2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정 긴축: 좌동</li> <li>- 공기업 민영화</li> <li>· 매각 수익은 공공부문 외채 상환에 사용</li> </ul>
2차 경제안정화대책 (95.3.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정 긴축: 95년 동비율 4.4%</li> <li>- 부가가치세율, 공공요금 인상</li> <li>· 부가가치세 10%→15%</li> <li>· 전기 요금 20%, 가솔린 가격 35% 인상</li> <li>- 재정 지출 9.8% 삭감</li> <li>· 정부조직 개편, 정부기관의 고용 동결, 공공투자 삭감</li> <li>- 발전소, 공항, 항만, 통신 시설의 민영화</li> <li>· 123~145억 달러의 수입 예상</li> </ul>

○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

- 멕시코의 재정정책 기조는 재정 지출 축소 및 세수 확대를 통한 긴축 정책임
- 이는 멕시코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과다한 재정 지출에 있었기 때문임
- 반면 우리나라는 건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균형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IMF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음
-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 개편,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 축소는 '고통 분담'의 성격이 강함
- 재정 정책 기조의 차이를 떠나서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
- 멕시코의 경우에도 1차 대책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, 대외적으로는 신인도 제고에 악영향을 미쳤음
- 따라서 대내외적 신뢰감 회복을 위해 현재 각 부처의 이해에 따라 난립하고 있는 정책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조율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
- 공공부문 지출 축소와 실업 대책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
- 멕시코의 경우 재정 지출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,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실업 문제 해결과 국내 경기 부양을 이룬 바 있음
- 현재 실업 문제 해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우리나라는 공기업 민영화의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, 실업 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
- 따라서 韓電 등 대규모 공기업을 비롯한 주요 국가 기간 산업과, 파산의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까지도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